

행정통합, 시·도의회 문턱 넘을까…동의 여부 촉각

市-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통합 지자체 출범 등 로드맵 공유

행정통합 '공감' 시점·방식은 이견

속도전 속 숙의 부족 우려도 제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과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구성할 민·관 합동기구인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발족 등 행정 통합 추진 로드맵 전반을 공유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지원 ▲중앙행정권한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AI·문화 기반 조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고 행정 통합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단일 안을 도출한 뒤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극 3특' 국가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적 한계

를 넘어서는 대전환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 절차·방식과 관련해선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시되면서 양 의회의 동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 대부분은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통합 시점과 방식을 두고는 의원들 간 의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의 숙의 과정 부

족, 시민 의견 수렴 문제를 제기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 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에서 묻는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시점을 못 박아놓고 급박하게 추진할 경우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행정 통합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느냐"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의회, 내일 의총서 행정통합 입장 정리

필요성 공감 불구 일부선 우려 목소리

주민투표 vs 의회 의결 놓고 논의 예상

전남도의회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도의회 역시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들이 광주시·전남도의 속도전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8일 오전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필요성과 통합청사 위치, 통합 행정기관 운영,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행정 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로 할지, 아니면 의회 의결로 대신 할 것인지 입장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들은 행정 통합의 기본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양 시·도지사의 일방적 추진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나주3) 의원은 입장문을 내 "행정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논의 없는 일방 추

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 시·도의회 중심 공식 논의 구조에서 재출발, 충분한 공론화, 도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류기준(민주당·회순2) 의원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중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성현출 민주 광주시당 대변인 "남구청장 출마"

"사람 중심 남구 발전 새 시대 열것"



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에너지밸리 산업 도시' ▲푸른 길과 숲이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 도시' ▲신·구도심이 조화로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도시' 등이다.

또한 3대 핵심 약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 설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강조했다.

성 대변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언급하며 "어린 시절 부족함을 메워준 것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힘이었고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자립의 법을 배웠다"며 "현장에서 체득한 공동체의 온기와 뜻을 남구의 미래를 위해 남김없이 이송겠다"고 말했다.

성 대변인은 남구의 변화를 위한 '5대 실천 설계도'를 제시했다.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가 되는 일상 문화도시' ▲아이가 안전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빈틈없는 교육·돌봄 특화 도

/변은진 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